

##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내일 73주년 4·3추념식... 오전 10시 목념 사이렌  
 코로나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참석인원 150명 제한  
 도, 관공서·공공기관·단체·도민에 조기 계양 당부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거행된다. 올해 추념식은 피해자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4·3 완전 해결의 기쁨이 마련된 후 열리는 첫 국가 의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거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분 간 제주 전역에 추모 목념 사이렌을 울리는 것으로 추념식을 시작한다. 이어 오프닝 영상 상영,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추모 영상 상영,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 공연, 참배객 헌화·분향 등의 순서로 추념식이 진행된다.

추념식은 KB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생중계된다.

도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유족 명예 회복 등의 의미를 담아 올해 추념식 슬로건을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로 정했다.

그동안 추념식 때에는 해마다 각계에서 1만명에서 1만 5000여명이 참석해 4·3영령들을 기렸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4·3 단체, 정부 대표, 국회의원 등 150명만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김태원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인원이 제한되

는 대신, 도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추모관을 열어 각계의 추모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격년 참석'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70주년)과 2020년(72주년)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4·3영령들을 위로했다.

올해는 '약속'에 의한 참석 주기는 아니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주 정치권과 도민사회도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도내 공직자들에게 “은 도민이 간절하게 염원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이 21년 만에 이뤄져 이번 4·3추념식은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다”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되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추념식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내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 도민 등을 대상으로 추념일 때 조기(弔儀)를 계양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가의 조기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기 계양 시간은 관공서·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3일 제주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에서 추념식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도는 시간당 강수량 5mm 이상이 되는 등 실외에서 추념식을 거행하기 힘들 경우 제주4·3평화교육센터 1층 대강당에서 추념식을 치른다. 최근 10년 사이 실내에서 추념식이 거행된 적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뿐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일 4·3평화공원을 찾은 전라남도 여수 안산중학교 학생들이 위령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제주4·3-여순10·19. 손잡고 함께 가는 평화·인권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의회 및 여순항쟁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 이상민기자

## 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공동 수업

2일 한림여중서 제주-전남 교사·학생들 참여  
 전남방문단, 평화공원과 4·3유적지 등도 답사

제주와 전남의 교사·학생들이 함께 하는 '제주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첫 공동수업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73주년 제주4·3을 맞아 1일부터 3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의회, 여순항쟁 연합 유족회 관계자 및 여수·순천 지역 교사·학생들을 초청해 '제주4·3-여순10·19. 손잡고 함께 가는 평화·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12일 제주-전남교육청의 '제주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업무협약'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장석웅 전남교육

감과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진권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 특위 위원장, 이규종 여순항쟁 연합 유족회장 등이 포함됐다. 여수 안산중과 순천평마중 학생과 교사들도 동행했다.

방문단은 첫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한 후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북촌초 등 북촌지역 4·3 유적지를 답사했다.

2일에는 오전 9시45분부터 한림여중 도서관에서 제주와 전남 학생·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공동수업'을 갖는다.

이날 수업에서는 이현주 한림여중

교사가 제주4·3과 여순10·19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등을 전하고, 이어 강준희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가 4·3의 경험을 생생히 알려준다. 수업 후에는 4·3급식도 체험한다.

방문단은 마지막 날인 3일 제주북초, 관덕정, 주정공장 등 제주시 지역 4·3유적지를 답사한 후 전남으로 이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주방문을 계기로 제주와 전남의 교사·학생들이 더 많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제주4·3과 여순10·19를 연계하는 평화·인권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평화·인권·상생 등의 가치를 여순10·19를 통해서도 발견하면서 4·3의 내면화, 4·3의 전 국가, 4·3의 세계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주민참여예산제 '시동'도, 주민참여 사업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계획은 사업 성과지표 관리와 사업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도입, 사업 시행 모니터링 등 제도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사업·참여사업·광역사업 등 3개 분야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사업은 110억원 규모로, 읍·면 4억원, 동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역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된다. 참여사업은 행정시 소관 사업 및 2개 이상 읍면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90억원 범위 내에서 행정시 조정협의회가 발굴한다. 광역사업은 도 단위 사업으로, 사업 심사를 별도로 거쳐 예산이 편성된다.

제주도는 내달 16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 공모를 시행한다. 도민 누구든지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강다혜기자

해안사구 보전 모색 토론회  
 2일 제주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농수축경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실태'를,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교장이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후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고재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부석희 구좌읍 평대리 마을여행 안내사, 고범녕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이 지정 토론을 한다.

이상민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 2021년 사람 중심 교통환경을 위해 차량 속도는 느려지고, 과태료는 상향됩니다



**50**  
km/h



**30**  
km/h



**1** 안전속도 5030 시행 : 2021. 4. 17.

-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는 제한속도 50km/h 이내, 보호구역 등 생활도로는 30km/h 이내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인상 시행 : 2021. 5. 11.

- 현행 일반 도로의 2배 ▶ 3배로 인상

